

기고



박수지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제대군인에게 감사

올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부터인가, 원래 그러했다는 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코로나19를 종결지를 유일한 희망인 백신은 기약 없이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루에만 몇백여 명의 사람들이 확진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끝을 대비해야 함을 알고 있다.
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학술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갑작스레 닥쳐왔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변화이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한편, 학업을 끝마치고 진로를 결정지를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종종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직업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생활 보장을 위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오지에서 근무와 함께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자녀 교육, 거주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거기에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군인은 특수한 군 계급구조 때문에 중도 전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평균 12년 정도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며,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50대에 실적이

가장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해마다 평균 7,000여 명의 직업군인이 군을 떠나 일반 사회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듯 매년 추산된 통계로 보았을 때, 직업군인의 제대는 시간에 흐름에 따른 당연한 변화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회 복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가수호라는 사명 아래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회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떠안게 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 온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즉, 정부와 기업은 책임감 있는 인재로서의 군인에 대한 가치 인식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은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대군인이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삶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결국 제대군인의 헌신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내어준 청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어려움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대군인의 사회적 증가와 제대라는 개인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센터를 통해 제대군인

대상 1:1 맞춤형 상담, 취·창업 지원 및 자격증 취득 등 국가보훈 차원에서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금 이자율을 연 3~15%에서 연 1.5~5.5%로 인하하고,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 및 난치성 질환의 경우 치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9개 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울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대비책과 더불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정서적인 관심과 응원 또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의 종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지금, 국가를 위해 애쓴 직업군인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가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제대'를 향한 지속적인 준비와 관심 또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인 인권과 코로나 방역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파출소를 찾아와 민원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으나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임이 드러났고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라 출입국에 통보하여 근로자는 강제출국 하게 되었다.
행사사건이 아니라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임에도 자발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무등록 외국인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총 39만 6654명(20. 5월기준)에 이르고 있다. 상당수는 모국에서 귀국을 거부하는 등 귀국길이 막힌 탓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에 방역당국과 경찰은 40만명에 이르는 무등록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에 대해 줄곧 고민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범무부령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무등록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통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무등록 외국인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감염이 의심되는 무등록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행 당시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시행된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로나 방역이 우선인 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첫째, 제도에 열거된 면제 대상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둘째, 피해자에 한정되어 목격자 등 참고인이 제외된다는 점. 셋째, 담당 공무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재량이 사실상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넷째, 외국인의 눈높이에서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등록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건소든 경찰이든 발견되면 '강제출국 당한다'라는 두려움을 가질만하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알려질수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역시 관공서에 도움을 바랄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